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변용: 아베 담화와 국제주의*

이정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015년 아베 담화는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서 역사수정주의보다 국제주의가 더욱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역사수정주의는 일본의 국가 정체성 인식에서 일본적 전통과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에, 국제주의 관점은 세계적 보편성을 강조한다는 차이를 지닌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은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였던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아베 담화의 명백한 청자는 일본에 대한 승자였던 미국이다. 역사수정주의에 입각한 역사 정책과 국제주의에 입각한 역사 정책은 미국에게 상이하게 이해된다. 정책적 차원에서 아베 정권의 국제주의적 역사 정책은 2013년에 주로 불거진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을 보는 미국의 불신과 불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었다.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 대한 이해는 너무 과도하게 아베 개인의 역사수정주의적 신념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을 아베의 신념에 기대어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국제주의적 성격은 아베의 신념보다는 아베 정권의 전략적 고려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

주제어 아베 신조, 아베 담화, 일본 역사 정책, 역사수정주의, 국제주의, 가치관 외교

I. 서론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일본 정치권 내에서 역사수정주의를 대표해 온 인물이었다. 아베는 역사 화해 노선에 대한 자민당 내 반동 세력의 대표 주자로, 역사 인식 현안에 대한 강경 보수적 입장을 대변해 왔다(Hughes, 2015: 15). 아베 정권하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정책이 반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아베의 역사수정주의 인식에서 기인한다(Edström, 2007: 81; Mochizuki et al., 2013: 35-38; 渡辺治, 2014). 아베의 역사 인식을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 대한 이해의 토대에 두는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기초연구사업의 지원과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NRF-2016S1A3A292440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1기 아베 정권과 제2기 아베 정권 모두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정책을 역사수정주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제1기 아베 정권기에 아베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하였다. 제2기 아베 정권기에 들어서는 2013년 12월 26일에 한 차례 참배를 감행한 후, 참배 감행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 집권 내내 매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속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와는 다른 모습이다. 또한, 1990년대 아베가 적극적으로 비판했던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그 담화를 계승한다는 정책 견해를 공식화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고노 담화의 부정, 무라야마 담화의 변경은 정치인 아베가 지속해서 표명해 온 그의 신념 사항이었지만(임은정, 2016: 189-191), 그는 총리가 되어서 이러한 자신의 신념을 정부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시키지는 못했다. 즉,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과 아베의 개인적 신념 사이에는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 아베의 역사수정주의적 신념이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 논문이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질문은 역사수정주의가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제약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이다. 두 번째 질문은 아베 정권은 역사수정주의 대신 어떠한 원칙에 입각해서 역사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가이다.

우선, 일본 정부의 역사 정책에 역사수정주의가 반영되는 것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은 설명이 있어 왔다.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서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제약 요인은 국제 구조이다. 우선 대중국 정책과 대한국 정책 차원에서 일본의 관여적 필요성이 있을 때,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역사 정책의 변경은 자제된다. 대표적으로 제1기 아베 정권기에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제와 관여적 대중 정책이 맞물려 있었다(田崎史郎, 2014: kindle location 1584). 또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는 미국의 정책 선호가 존재한다. 동아시아 지역 전략 차원에서 군사적 미일 동맹 강화를 희망하는 미국에게 적극적 평화주의로 상징되는 아베의 안보 정책 변화는 적극적으로 환영되는 사항이지만,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일본의 역사 정책 변환은 기피되는 사항이다. 특히 한·미·일 안보 협력 기제의 발전을 기대하는 미국에게 일본의 역사 정책에 따른 한일 관계의 악화는 적극적으로 회피

되어야 하는 것이다(Mochizuki et al., 2013: 39). 한편, 아베 역사 인식의 정책화에 대한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일본 국내 정치가 제기되어 왔다. 2006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반아베 그룹에 의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쟁점화가 이루어졌었고, 이것이 제1기 아베 정권에서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를 억제한 하나의 요인이었다(中北浩爾, 2014: kindle location 3280). 한편 제2기 아베 정권에서도 아베의 강력한 정권 장악력에도 불구하고,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의 변경에 대하여 자민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고, 이것이 대폭적인 현상 변경으로서의 역사 정책 노선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으로 논의된다(『日本經濟新聞』 2015. 2. 7). 이러한 제약 논의들 중에서 본 논문은 2013년 12월 26일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 이후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본다.

본 논문은 2015년 아베 담화를 계기로 국제주의가 제2기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의 중심에서 있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이 역사 수정주의와 역사 화해 노선이라는 기존의 일본 역사 인식의 양대 축을 벗어나 국제 질서에서의 협조라는 기준에 입각한 국제주의로 재정립되었음을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수정주의의 가시성을 떨어트리면서 국제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본질적 성격이라고 판단하며,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국제주의 강조의 성격이 갖는 의미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국제주의적 성격은 미국과의 협조라는 일본 외교 정책의 핵심 기조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 가치관 외교와 적극적 평화주의의 외교 정책 방향성 속에서 역사 정책의 기조가 역사수정주의에서 국제주의로 변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역사수정주의가 역사 정책에 반영되는 것에 어떠한 제약 요인이 작동했는지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국제주의가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중심에 들어서게 되는 배경과 국제주의에 입각한 일본 역사 해석과 국가 정체성 인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베 담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역사수정주의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일본의 역사 정책을 관찰하는 프레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아베의 역사 인식과 제1기와 제

2기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 사이의 편차에 관해서 기술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2015년에 총리 자문 회의로 구성되었던 ‘20세기를 되돌아보고 21세기의 세계 질서와 일본의 역할을 구상하는 지식인 간담회(20世紀を振り返り21世紀の世界秩序と日本の役割を構想するための有識者懇談会, 이하 21세기구상간담회)’의 논의를 통해 제2기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국제주의적 역사 인식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아베 담화에 나타난 국제주의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II. 아베 신조의 역사 인식과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

1. 아베 신조의 역사수정주의적 의원 활동과 역사 인식

역사 정책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1990년대의 역사 화해 노선으로 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고노 담화, 비자민 연립 정권의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에 의한 침략 전쟁 발언, 자민-사회-신당 사키가케 연립의 무라야마 정권에 의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는 1990년대 초·중반 자민당 내 보수 리버럴 세력과 사회당으로 대표되는 혁신 정치 세력에 의해 주도된 탈냉전기 역사 화해 노선의 결과로 볼 수 있다(中野晃一, 2015: kindle location 1178). 1990년대 역사 화해 노선의 대두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성격 규정과 전쟁 시의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변화된 움직임에 보여 준다.

하지만 역사 화해 노선에 대한 일본 정치권 내의 반발 흐름도 강력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의 성격 해석에 대한 우익적 사고는 일본 사회의 저변에서 전후 내내 면면히 이어져 왔었다(安田浩一, 2018; 조진구, 2018). 그렇지만 제도 정치권에서 역사수정주의가 대두된 것은 역사 화해 노선에 대한 반동의 성격이 크다(中野晃一, 2015: kindle location 1301). 자민당 내의 역사수정주의 세력은 역사 화해 노선 정책에 대한 거부감 속에서 집결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성격 규정 문제, 이와 연관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반대되는 인식을 보유하는 자민당 정치인들은 1993년 역사·검토위원회(歴史・検討委員会)라는 의원 모임을 결성하였다. 역사·검토위원회는 역사

수정주의 인식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역사 정책에 대한 집단적 의견 개진의 목소리를 내는 시발점이었다(구유진, 2016: 134-135). 호소카와 총리의 칩락 전쟁 발원을 계기로 결성된 역사·검토위원회에서는 역사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을 대변하는 대표적 지식인들을 초청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 도쿄 재판의 부당성,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재고, 난징 대학살의 허구성 등을 주제로 공부 모임을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칩락 전쟁의 부정과 전쟁 범죄의 상대화된 인식을 공유하였다(구유진, 2016: 136-138). 1995년 8월 15일 역사·검토위원회 공부 모임의 결과물로 간행된 단행본 제목이 전시기에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던 대동아전쟁을 전면에 내세운 『대동아전쟁의 총괄(大東亜戦争の総括)』이라는 점은 역사·검토 위원회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역사·검토위원회는 1995년 무라야마 정권에서 추진된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로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歴史を教訓に平和への決意を新たにする決議, 이하 부전결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면에 내세운 종전50주년국회의원연맹(終戦50周年国会議員連盟)으로 연결된다. 또한 역사수정주의 지식인들이 1996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 이하 새역모)’을 결성하고 역사수정주의 세계관을 교과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을 때, 자민당 내 역사수정주의 그룹에서는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議員の会, 이하 역사교육의원연맹)’을 결성하고, 새역모 활동을 뒷받침하였다(이계황, 2003).

아베는 역사·검토위원회, 종전50주년국회의원연맹, 역사교육의원연맹으로 이어지는 1990년대 일본 정치권 내 역사수정주의 움직임의 중심에 있었다. 1993년 7월 18일에 행해진 제4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중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아베는 그해 8월 23일에 결성된 역사·검토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종전50주년국회의원연맹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 그가 1995년 6월 9일의 부전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의 적극적인 역사 관련 의원 모임 참여와 연결된다. 그는 역사교육의원연맹에서도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구유진, 2016: 141).

아베가 1990년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원 모임에서 발견되는 역사수정주의적 성향은 아베의 역사 인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의 오랜 정치 활동

속에서 그의 역사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은 의회 속기록과 신문 기사, 저서 등에서 다수 발견된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전형적인 강제 연행 증거 부재론을 보여 준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군의 “강제 연행 증거가 없다”라는 그의 입장이 쉽게 발견되며, 논쟁의 소지가 있는 위안부 문제를 역사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견해와 함께 고노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임은정, 2016: 190-191). 또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옹호 발언도 매우 쉽게 발견된다. 고이즈미 정권하에서 관방 차관, 자민당 간사장, 관방 장관을 역임하면서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지지를 보여야 하는 상황과 맞물려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그의 찬성 입장은 2000년대 초반 신문 기사에서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다(임은정, 2016: 190). 더불어 그가 2004년에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와 함께 발행한 대담집 『이 국가를 지킬 결의(この国を守る決意)』와 2006년 그가 총리 취임 전에 발행한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国へ)』에서 역사 현안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해 한국과 중국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반대론이다(安倍晋三, 2006; 安倍晋三·岡崎久彦, 2004).

다만 역사 인식 관련 현안 중 아베의 입장이 발언으로 잘 노출되는 않는 사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성격에 대한 관점이다. 즉, 침략에 대한 부정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총리로 2013년 4월 23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침략의 정의는 학문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발언을 하였다(임은정, 2016: 189). 이는 2013년에 제2기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 전개에 대한 국내외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요인이었다.

2. 아베 정권에서 역사수정주의의 반영과 제약

아베의 역사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은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강화하였다. 총리 취임 전에 아베가 보여 준 역사 인식은 총리로 취임한 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고노 담화 부정, 무라야마 담화의 변경을 전망케 하였다.

하지만 제1기 아베 정권에서 아베는 역사 정책에 본인의 역사 인식을 반영하

지 못했다. 제1기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서 가장 큰 장애 요소는 2001년부터 5년 동안 지속된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이었다.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참배 강행은 한일 관계와 중일 관계의 악화를 가져왔다. 고이즈미 정권에서 추구한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대한 적극적 관여 정책은 야스쿠니 문제로 진전될 수 없었다(Hosoya, 2013). 또한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참배 강행은 자민당 내에서 반발을 야기했다. 고이즈미는 높은 대중적 인기를 기반으로 자민당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지만, 야스쿠니 문제에 대한 당내 반대 여론은 상당했다. 특히 고이즈미가 1990년대에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냈던 가토 고이치(加藤 紘一)와 야마사키 다쿠(山崎拓)가 야스쿠니 참배 자제의 입장을 견인하였고, 이에 더해 고가 마코토(古賀誠)와 후쿠타 야스오(福田康夫) 등이 동의하면서 야스쿠니 참배 자제 목소리는 자민당 내에서 커져 갔다(若宮啓文, 2014: kindle location 1393). 이들은 2006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아베에 대한 반대 세력이 되었다. 반아베 세력에서 지지하였던 후쿠다가 총재 선거 출마를 포기한 후 반아베 세력은 아베의 총재 선거 승리를 막지는 못했지만, 아베가 총리로 야스쿠니 참배를 수행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되었다. 국내 정치적 제약은 고이즈미 정권기에 악화된 대중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책 목표와 맞물려 아베가 제1기 정권기에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못한 배경이 된다.

더불어, 아베는 총리 취임 후 과거의 개인적 입장과는 달리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발 물러섰다. 물론 2007년 미국 하원에서 혼다 의원의 주도하에 중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고 이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 상황에서 아베는 자신의 개인적 신념을 표출시켰다. 2007년 3월 1일 일본 국회에서 있었던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라는 아베의 발언은 오히려 미국 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었다(남상구, 2014: 453). 하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의 개인적 신념이 일본 정부의 정책 변경을 야기하지는 못했다.

전체적으로 제1기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은 역사수정주의적 역사 인식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물론 제1기 아베 정권은 1년의 짧은 기간 동안만 유지되었기 때문에 역사 정책에서 역사수정주의의 제한성을 단정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아베는 제1기 아베 정권기 역사

정책의 소극성에 대한 자아비판과 역사 정책의 대폭적 변경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면서 제2기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를 증폭시켰다. 그는 “총리 재임 시절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라며 다시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참배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고, 고노 담화 수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였다(임은정, 2016: 190-191).

2012년 12월 26일 출범한 제2기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서 역사수정주의적 신념은 2013년 12월 26일 기습적으로 감행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아베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위안부 문제와 고노 담화에 대해서는 제2차 아베 정권 발족 후 “고노 담화는 관방 장관 담화이기 때문에 총리가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다(남상구, 2013: 249). 물론 제2기 아베 정권에서는 고노 담화가 나오기까지의 경위에 대한 검증은 실시하였다. 이 검증은 고노 담화 집행 과정이 실증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외교적 타협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남상구, 2014: 460-46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기 아베 정권은 고노 담화 자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견해를 유지하였다(남상구, 2014: 466-467).

제2기 아베 정권의 초기 시기인 2013년과 2014년에는 야스쿠니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정부 정책에 역사수정주의적 성격을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노력이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하지만 역사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에 부합하는 노선으로 역사 정책의 대폭적 변경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III. 21세기구상간담회와 ‘세계 속의 일본’

1. 21세기구상간담회의 배경

제2기 아베 정권의 등장에 대해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역사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였지만, 제2기 아베 정권에게 역사 정책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다. 제2기 아베 정권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경제와 안보였다.

경제 재건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상정하고 이를 위한 아베노믹스를 전면에 내세우며 출범한 제2기 아베 정권은 2013년과 2014년 엔저와 주가 상승 속에서 높은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輕部謙介, 2018). 한편 집권한 후 미일 동맹의 군사적 차원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안보 정책 기조 속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3년 2월 ‘안전 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 이하 안보법제간담회)’를 출범시켰다(강경자, 2015). 아베 정권은 2014년 5월에 제출된 안보법제간담회의 최종 보고서를 반영하여 2014년 7월 1일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을 하였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은 2015년 미일 안보 신가이드 라인과 안보 법제 개편으로 이어져 일본의 안보 체제는 제2기 아베 정권하에서 기본적인 틀이 바뀌게 된다(박철희, 2016).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제2기 아베 정권에게 역사 정책은 중점 두 분야에 대한 정책 역량의 집중을 저해하고 정권에 대한 대중 지지의 약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아베의 자문 그룹 중 오카자키를 비롯한 여러 명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서둘지 말 것을 조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日本經濟新聞』 2013. 11. 17.).

한편 제2기 아베 정권은 한국, 중국과 이미 외교적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출범하였다. 제2기 아베 정권 초기의 중일 관계는 센카쿠 국유화에 따른 영토 갈등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2012년 노다 정권에 의한 센카쿠 국유화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 공선의 항행(일본 입장에서 영해 침범)이 빈번해지면서 동중국해에서의 갈등이 일상화되었다(이정환, 2018b). 제2기 아베 정권에서는 센카쿠 문제에 대한 노다 정권의 강경 자세를 계승하였기 때문에, 중일 관계의 갈등 양상은 지속되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총리 사이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이 실패한 후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방문을 단행하였고, 제2기 아베 정권 출범 전의 한일 관계는 독도 문제를 중심으로 냉각되어 있었다. 제2기 아베 정권의 출범과 거의 동시에 한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을 때,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전된 노력을 주문하며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조윤수, 2018: 116). 한국,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이미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사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외교 갈등을 격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정권 내에 존재했다.

제2기 아베 정권에서 역사 정책 변경을 통해 주변국과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미국에서도 강했다.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이라는 슬로건 속에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던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게 안보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협조 자세로 나서는 아베 정권은 긍정적이었다(Campbell, 2016: 209). 하지만, 역사 문제로 빚어진 동북아의 역내 갈등 구조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2기 아베 정권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공존하였다. 2013년 2월 아베의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발언은 미국 내에서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말 것을 상징적 행동을 통해 보여 주기도 했다. 2013년 10월 미일 외교·국방 장관 연석 회의(2+2)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존 케리 국무 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 장관이 야스쿠니 대안 마련 논의에서 대체 추모 시설로 여겨지던 지도리가우치 전몰자 묘원(千鳥ヶ淵戦没者墓苑)에 방문, 헌화하였다. 미일 안보 신가이드 라인을 주제로 미일 동맹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역사문제에서 아베 정권의 도발 가능성을 견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日本經濟新聞』 2013. 10. 4).

2013년 12월 26일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 강행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두 달 전 두 장관의 지도리가우치 묘원 헌화와 한 달 전 바이든 부통령의 아시아 순방 맥락에서 벌어진 것이다. 바이든 부통령은 2013년 11월 하순 중국의 방공 식별 구역 설정으로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일본, 한국, 중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였고, 그는 한국과 중국에게 일본 정부의 자제적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 강행에 대해 미국 국무부에서 유례 없이 ‘실망(disappointed)’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입장을 표명했던 것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전제되어 있었다(The Economist 2014. 1. 18).

국내적 여론 악화와 외교 관계 악화 등의 이유로 제2기 아베 정권의 중추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 장관도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田崎史郎, 2014: kindle location 1611). 아베의 참배 강행과 집권 1년 기념일이라는 일정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는 역사수정주의 세력에 대한 배려, 2014년

외교 일정 고려 등의 전략적 측면이 언급되었다(田崎史郎, 2014: kindle location 1615). 확실한 것은 아베 정권의 관계자들이 미국의 강력한 유감 표시를 예상외로 생각했다는 점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기존까지 한일 관계, 중일 관계의 외교 이슈로 전개되어 왔다. 2013년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 강행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태도는 제2기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서 미국 변수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물론 2014년과 2015년 미일 관계에서 역사 문제가 아니라 안보 협력 강화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협상이 중심에 있었다. 다만 미국에서 일본의 역사 정책 변경을 미일 협력의 저해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 감행 이후에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 강행 이후 제2기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은 전후 70주년인 2015년에 아베 정권에서 어떠한 입장을 내놓는가에 집중되었다. 아베는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에 반대하는 역사 인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전후 60주년이었던 2005년에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서 답아낸 고이즈미 담화와는 차별화된 자신만의 담화를 만들어 내고 싶어했다(『日本經濟新聞』 2015. 1. 26). 무라야마 담화와는 다른 ‘미래 지향적’ 내용을 담아내고 싶다고 발언해온 아베가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전후 70주년 담화를 표명할 것인가에 대해 일본 국내외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전후 70주년 담화는 제2기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간주되었다.

21세기구상간담회는 전후 70주년 담화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총리 자문 회의로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6회 개최되었고, 8월 7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1세기구상간담회에서 동의된 내용들이 전후 70주년 담화에 담기고, 이것이 제2기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중심적 요체가 된다는 점에서 21세기구상간담회의 의의가 있다.

2. 국제 질서와 일본

하지만 21세기구상간담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이미 논의 결과의 내용은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구상간담회는 니시무로 다이조(西塞泰三, 일본우정

회장 겸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회장),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 학장), 이즈카 게이코(飯塚恵子, 요미우리신문 국제부장), 오카모토 유키오(岡本行夫, 외교평론가), 가와시마 신(川島真, 도쿄대학 교수), 고지마 요시히로(小島順彦, 미츠비시 상사 회장), 고조 요시코(古城佳子, 도쿄대학 교수), 시라이시 다카시(白石隆, 정책연구대학원대학 학장), 세야 루미코(瀬谷ルミ子, 일본분쟁예방센터 이사장), 나카니시 데루마사(中西輝政, 교토대학 명예 교수), 니시하라 마사시(西原正, 평화·안전보장연구소 이사장), 하네다 마사시(羽田正, 도쿄대학 교수), 호리 요시토(堀義人, 글로벌경영대학원 학장),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 리츠메이칸대학 객원교수), 야마우치 마사유키(山内昌之, 도쿄대학 명예교수), 야마다 다카오(山田孝男, 마이니치신문 편집위원)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¹ 이 위원 중 역사수정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카니시뿐이다. 후에 나카니시는 21세기 구상간담회에서 자신의 의견이 고립되어 있었다고 회고한다.²

21세기구상간담회의 총 6회 회의에서는 5명의 외부 발표자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만약 초청된 이들이 역사수정주의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다면, 나카니시와 합세하여 일본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수정주의 인식이 전후 70주년 담화에 반영되도록 만들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발표자로 초빙된 오쿠와키 나오야(奥脇直也, 메이지대학 교수), 다나가 아키히코(田中明彦, 당시 국제 협력 기구 이사장), 구보 후미야키(久保文明, 도쿄대학 교수), 호소야 유이치(細谷雄一, 게이오대학 교수), 히라이와 순지(平岩俊司, 간사이대학 교수)는 국제법, 국제 정치, 지역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역사수정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간담회에서 내놓은 결과물의 성격은 간담회 구성에서 이미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개헌에 대한 각의 결정의 논리적 배경이 되던 안보법제간담회에서도 그 위원들이 일본의 안전 보장 역량 강화 필요성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자연법적 성격 등에 대해 이미 의견이 일치되어 있었다. 일본의 간담회에서 상이한 의견의 논쟁 속에 합의를 이루어 내는 과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베 정권에서는 정책 결정의 정당화 수단으로 간담회를 빈번하게 사용하

¹ 각 위원의 소속과 직위는 2015년 간담회 개최 당시 기준이다.

² 中西輝政(2015), “戰後70年と日本の進路”. <https://www.kokuminkaikan.jp/chair/detail20150830.html>(검색일: 2019. 5. 20).

고 있지만, 간담회의 결과는 간담회를 구성하는 정권 관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³

역사수정주의 역사 인식이 간담회 내용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일본 근·현대사에 대해 나카니시와 의견을 같이하는 인사들이 보장되었어야 했다. 아베는 그러한 인사들과의 인연이 깊다. 2007년 총리에서 물러난 후, 대표적 보수 사상가인 니시베 스스무(西部邁)가 주선한 공부회를 매월 가져왔다. 또한 2012년 아베의 재기를 바라면서 구성된 아베 신조 총리를 원하는 민간인 유지 모임(安倍晋三総理大臣を求める民間人有志の会)의 발기인에도 역사수정주의적 인식을 가진 인사들이 다수 존재한다. 2007년에서 2012년의 5년 동안 아베는 이들 보수 인사들과의 빈번한 교류 속에 보수색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관찰되어 왔다(『日本經濟新聞』, 2013. 11. 17). 하지만, 21세기구상간담회에서는 아베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역사수정주의적 역사 인식 보유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21세기구상간담회에 참여했던 위원과 초빙 발표자 총 21명 중 나카니시만이 예외적이다.

21세기구상간담회에서 다룬 논의 주제는 아래와 같다.

① 20세기 세계와 일본의 행보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일본의 20세기 경험에서 교훈은 무엇인가. ② 일본에서는 전후 70년간 20세기의 교훈을 근거로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특히 일본의 평화주의, 경제 발전, 국제 공헌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③ 일본에서는 전후 70년간 미국, 호주, 유럽의 국가들과 어떻게 화해의 길을 걸어왔는가. ④ 일본에서는 전후 70년간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어떤 화해의 길을 걸어왔는가. ⑤ 20세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21세기 아시아와 세계의 비전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 이에 일본에서는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는가.⁴

간담회 내용 구성과 발표문의 중심을 이루는 특징은 일본적 맥락이 아니라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일본의 행위와 위상을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발표와 토론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제2차 모임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기타오카

³ 아베 정권 간담회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三谷太一郎(2015)를 참조.

⁴ 21세기구상간담회의 논의 주제는 제1차 회의 때 아베 총리에 의해 직접 제시되었다. https://www.kantei.go.jp/jp/97_abe/actions/201502/25_21c_koso.html(검색일: 2019. 5. 20).

가 그러한 관점을 총괄적으로 보여 주었다. 기타오카는 19세기 약육강식의 시대와 일본의 근대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에 대한 일본의 협조, 이로 부터의 이탈과 전쟁의 과오, 전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일본 전후 체제의 부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1世紀構想懇談會, 2015: kindle location 175). 세계사적 맥락에서 일본 국가 행위를 판단하는 논조는 3차 모임에서의 다나카와 4차 모임에서의 호소야가 발표한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다나카는 기타오카가 전체적으로 설명한 내용 중에서 전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맞추어서 발전해 온 일본의 전후 시대에 대해 중점을 두어 발표를 진행하였다(21世紀構想懇談會, 2015: kindle location 685). 한편 영일 양국 사이의 전후 화해에 대한 발제를 담당한 호소야는 발표 주제를 설명하기 전에 1920년대 국제 질서에서 일본이 이탈하게 된 점에 대한 반성이 일본이 역사 화해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21世紀構想懇談會, 2015: kindle location 1330).

기타오카, 다나카, 호소야 3인이 세계사적 맥락을 강조하면서 보여주었던 국제 질서에 대한 협조를 기준으로 일본의 국가적 행위를 판단한다는 관점은 현재 일본에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유지, 강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논리로 연결된다(21世紀構想懇談會, 2015: kindle location 269). 기타오카, 다나카, 호소야 3인 모두 안보법제간담회의 위원이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21세기구상간담회의 토론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기타오카 등의 국제주의의 관점은 역사수정주의 역사 인식과 공존하기 어렵다. 우선 역사수정주의는 역사 인식에서 일본 중심주의이다. 일본이라는 문화 공동체의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일본 역사를 해석하는 복고주의가 역사수정주의의 중심 부분을 이룬다.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전후 진보 사관이 전후 개혁기 미군정의 민주주의 개혁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일본의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고 있다고 본다. 그들은 일본사는 일본의 역사적 내력 속에서 파악해야만 한다고 주장해 왔다(坂本多加雄, 1994; 西尾幹二, 1999). 국제주의의 관점은 진보 사관과는 거리가 있지만, 일본사를 일본 밖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역사수정주의의 세계관과 충돌한다.

나아가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발견되는 전전과 전후 시기 국제 질서의 성격에 대한 평가도 역사수정주의의 세계관과 충돌한다. 국제주의의 관점에서는 전후 자유

주의 국제 질서의 유지, 발전에 대한 미국의 공헌을 높게 보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조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역사수정주의 세계관에서 미국은 전후 일본이 자신의 문명론적 가치관을 반영한 국가 체제와 사회 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였다. 전후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의 개정 문제에 대해 국제주의 관점과 역사수정주의 모두 개헌론으로 연결되지만,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 개헌은 자주성과 전통성, 즉 미국에 의해 훼손된 일본적 가치와 국가적 명예의 복구라는 의미를 갖는다(이정환, 2018a). 반면에 국제주의 관점에서 있는 기타오카에게 개헌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공헌하면서 일본의 번영이 기대고 있는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北岡伸一, 2000).

또한 1920년대 국제 질서의 성격에 대해서 국제주의 관점과 역사수정주의의 세계관은 상이하다. 국제주의 관점에서 1920년대의 국제 질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화에 대한 반성 속에 평화와 자유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성격으로 이해된다(21世紀構想懇談會, 2015: kindle location 1402). 역사수정주의에서 1920년대의 국제 질서는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인종 차별 반대 조항이 채택되지 못한 것이 상징하듯 인종주의가 지속되던 시대이다. 국제 질서 속에 배태되어 있는 인종주의는 최강대국 미국의 배일 정책과 연동되어 반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西尾幹二, 2001: 257-258). 국제주의 관점은 1920년대 국제 질서의 자유주의적 성격이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룩한 국제 질서와 기본적 가치에서 연속되는 것으로 파악한다(21世紀構想懇談會, 2015: kindle location 1444). 하지만 역사수정주의 세계관에서는 워싱턴 회의의 4개국 조약, 5개국 조약, 9개국 조약은 제국주의적 세력 균형 차원의 성격을 띠며, 1920년대 말 중국의 국민당 정부에서 9개국 조약의 내용에 손상을 주는 정책 변경을 시도하였을 때 9개국 조약의 보증자인 미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본다(西尾幹二, 2001: 263-264).

1920년대 국제 질서에서 일본이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수정주의 관점은 국제 질서 자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일본이 자구책을 추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국제주의 관점은 일본의 잘못된 판단으로 본다. 이에 따라 1931년 만주 사변 이후 일본의 군사 행동에 대해 침략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제주의 관점에서는 거리낌이 없다. 21세기구상간담회 위원 중

역사수정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카니시는 침략 용어 사용에 대한 자신의 반대 입장이 간담회 구성원들 사이에 동의를 받지 못하고, 결과 보고서 본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주로 처리되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다(中西輝政·西岡力, 2016).

21세기구상간담회는 국제주의 관점에서 일본의 근·현대사를 보고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최종 보고서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더 정확하게는 국제주의 관점을 담아내기 위한 간담회 위원 구성이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구상간담회에서 주류적인 국제주의 관점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대해 성찰적 시각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적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현 상황에 대한 정당화이며, 그렇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21세기구상간담회 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역사 화해 노선이 반성의 대상을 아시아로 삼고 있다는 점과 큰 차이를 보인다. ‘세계 속의 일본’을 고려해야 한다는 21세기구상간담회의 국제주의 관점에서 ‘세계’는 ‘미국’으로 대치되어도 전혀 무리가 없다.

IV. 국제주의 기준 아래의 아베 담화

1. 아베 담화의 역사 인식

21세기구상간담회의 결과 보고서에 기반한 총리 담화는 2015년 8월 14일에 발표되었는데 아베 담화 발표 이전에 아베 담화에 대해서 대내외적인 관심이 크게 증폭되어 있는 상태였다. 주된 관심은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에서 사용된 핵심 개념인 ‘침략’, ‘식민지 지배’, ‘반성’, ‘사죄’의 표현이 들어가는 것인가에 있었다. 과거 두 담화에 사용된 네 단어는 역사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에서 거부되는 핵심 사항이었고, 아베의 총리 담화에 이 표현이 들어갈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日本經濟新聞』 2015. 3. 8). 결과적으로 아베 담화에는 이 네 단어가 모두 들어가 있다. 하지만 그 단어의 서술 방식은 무라야마 담화, 고이즈미 담화와는 크게 다르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에서는 일본을 주어 자

리에 놓고, 일본이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통해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제국(諸國)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라는 직접적 표현이 사용되었다.⁵ 반면에 아베 담화에서 침략은 사변, 전쟁과 함께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사용되었으며, 사변, 침략, 전쟁을 일본이 수행했다는 표현은 없고 그 대신 ‘사변, 침략, 전쟁, 어떠한 무력의 위협과 행사도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두 번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로 기술되어 있다. 한편 식민지 지배도 과거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했다는 직접적 표현 대신 ‘식민지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하고’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에서 사용된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라는 표현은 아베 담화에서 과거형으로 대치되었다. 아베 담화에서는 ‘일본은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해 거듭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라는 과거형의 서술을 취했다.

아베 담화 발표 후 아베 담화의 교묘한 기술 방식 속에서 전쟁에 대한 일본의 책임성과 이에 대한 반성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기술 방식의 측면에서 아베 담화는 사과와 정신이 담겨 있지 않으며 역사수정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은 주변국에서 더욱 강력하게 주장되었다(박찬승, 2016; 이종국, 2016; 최순욱, 2016).

내용 측면에서 아베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 고이즈미 담화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일본이 과거 과오에 이르는 역사적 경과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에서는 일본의 과거 과오 자체의 역사적 원인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 일본이 과오를 저질렀음에서 시작해서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로 귀결되는 단순한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양적으로 그리 길지 않다. 반면에 아베 담화는 일본이 저지른 과오의 성격이 무엇이며, 그에 도달하는 일본 근·현대의 과정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서술하

⁵ 무라야마 담화, 고이즈미 담화, 아베 담화의 한국어 표기 사용은 주대한민국 일본 대사관의 번역본에 따랐다. 1995년 8월 15일 총리 담화(무라야마 담화): https://www.kr.emb-japan.go.jp/rel/r_postwar/r_postwar_050609.html(검색일: 2019. 5. 20), 2005년 8월 15일 총리 담화(고이즈미 담화): https://www.kr.emb-japan.go.jp/rel/r_postwar/r_postwar_050815.html(검색일: 2019. 5. 20), 2015년 8월 14일 총리 담화(아베 담화): 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150814.html(검색일: 2019. 5. 20).

고 있으며, 이 때문에 무라야마 담화나 고이즈미 담화에 비해 2배 이상의 긴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베 담화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본의 과오는 ‘세계의 대세를 보지 못하고’, ‘국제 사회에서 엄청난 희생 위에 구축하려 했던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자가 된 사건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만주 사변, 그리고 국제 연맹 탈퇴’이다. 전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역사 해석에서 1931년 만주사변을 침략 전쟁의 길로 걸어가게 된 계기로 보는 것은 특별하지 않지만, 그 이전 시기에 대한 아베 담화의 내용은 문제적이다. 아베 담화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자이고, 반대로 국제 질서에의 협조, 공헌, 그 속에서의 성공이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속에서 1930년대 국제 질서의 도전자가 되기 이전의 일본이 걸어 온 길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베 담화는 19세기 후반을 서구 국가들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물결’이 아시아에도 밀려왔는데, 이 속에서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입헌주의를 수립하고, 독립을 유지하였음과 더불어 러일 전쟁의 승리로 ‘식민지 지배 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19세기 일본의 근대적 성공에 대한 장광설은 역사수정주의적 인식과도 부합한다. 이 인식 구조에서 일본의 한국 병합에 대한 문제 의식은 포함될 여지가 없다(윤석정, 2019). 아베 담화가 당대 국제 질서에 잘 맞아떨어지는 국가 행위 자체에 대해 모두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아베 담화의 기술 내용은 아베 담화 전반에 흐르는 당대 국제 질서에 대한 절대적 가치 부여의 관점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아베 담화가 역사수정주의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결정적인 부분은 1920년대에 대한 기술에 있다. 아베 담화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에 대한 반성적 사고 속에 ‘사람들은 평화를 강력히 바라며 국제 연맹을 창설하고, 부전 조약(不戰條約)을 탄생’시켰으며, ‘전쟁을 위법화하는 새로운 국제 조류가 생겨났으며’, ‘당초에는 일본에서도 보조를 함께했다’고 기술한다. 즉 1920년대 일본에서 당시의 국제 질서에 협력하였음을 강조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그 당시 일본의 외교적 선택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아베 담화

는 역사수정주의의 역사 인식과 갈라진다. 역사수정주의적 이해에서 1920년대의 국제 질서는 제국주의 세력 균형의 연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인종주의적 편견에 기반한 부정적인 것이다. 아베 담화는 국제 연맹과 부전 조약을 전면에서 내세우면서 반전 사상을 1920년대 시대 정신으로 놓고 이에 대해 일본에서 협력하였음을 강조하며, 1920년대의 국제 질서와 이에 대한 일본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아베 담화에서 사용한 전후 일본의 ‘국제 사회로의 복귀’ 표현은 고이즈미 담화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며,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국제 사회의 일원’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일본이 전후에 무엇을 수행하였는가에 대해 아베 담화의 기술은 독특하다.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일본의 ‘평화와 번영’ 속에 ‘평화의 존귀함’을 잃지 말고 ‘전쟁의 비참함’을 후세에 전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이에 기반한 ‘근·현대에서 일본과 근린 아시아 제국과의 관계에 관한 역사 연구를 지원하고 각국과의 교류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하는 평화 우호 교류 사업을 전개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무라야마 담화는 담화의 청자로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이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고이즈미 담화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ODA나 유엔 평화 유지 활동 등을 통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물질·인적 양면에서 적극적으로 공헌’하였음을 기술하면서 일본의 국제 공헌의 내용상 아시아 지향적이기보다는 일반론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자위대의 작전 수행과 연결된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이 언급된 것은 고이즈미 정권기 일본 안보 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전후 일본의 국제 공헌 내용에서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아시아와의 우호 교류 증진 노력, 고이즈미 담화에서는 ODA와 PKO 활동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아베 담화에서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고, 법의 지배를 존중하며, 오로지 부전(不戰)의 맹세를 견지’해 왔음을 기술하고 있다. 과거 두 담화에서 해외에 어떠한 지원을 했었는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공헌의 내용에 대한 기술이 국제 사회의 시대 정신에 일본이 얼마나 부합해 왔는가의 기술로 변동되어 있다. 즉, 전후 일본의 의의를 국제 질서와의 협조로 기술하고 있다.

아베 담화의 핵심 키워드는 국제 질서이다. 시대의 국제 질서에 부합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일본의 근·현대사에서 각 시기별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국제주의적 역사 인식은 21세기구상간담회에서 기타오키나 호소야가 보여 준 인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주의적 역사 인식이 2015년 8월 14일에 발행된 아베 담화에서 처음으로 정부 견해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2015년 4월 22일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동 회의) 60주년 기념 정상 회담에서의 아베 총리 연설⁶과 동월 29일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의 아베 총리 연설⁷에서도 국제 질서에 대한 강조는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⁸ 이는 21세기구상간담회의 논의 과정 또는 이전에 제2기 아베 정권 내에서 국제주의적 관점이 정부 역사 정책의 공식적인 외형으로 선택되었으며, 이에 입각하여 21세기구상간담회의 구성원이 선택되었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

2. 아베 담화와 가치관 외교

아베 정권에서 국제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 단초는 일본이 장래 국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짐한 부분에서 발견된다.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깊은 반성에 입각하여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배척’하고 국제 협조를 촉진하여 ‘평화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널리 확산’시켜야 함을 주장하면서, 피폭국의 입장에서 ‘무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지향하여 핵 확산 금지 체제의 강화 등 국제적인 군축’을 추구할 목표임을 언급하고 있다. 고이즈미 담화에서는 ‘아시아 제국과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 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과 국제 사회의 여러 곤란한 문제(지금 도상국의 개발이나 빈곤 극복, 지구 환경의 보전,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방지, 테러 방지·근절 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술하고 있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 모두 당시 정권의 외교적 과제와 정책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 무라야마 담화에는 아시아와

⁶ https://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5/0422speech.html(검색일: 2019. 5. 20).

⁷ https://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5/0429enzetsu.html(검색일: 2019. 5. 20).

⁸ 다만 반동회의 60주년 기념 정상 회담 연설과 미국 의회 연설에서는 ‘침략’과 ‘사죄’ 표현이 빠져 있다(『日本經濟新聞』 2015. 4. 23; 2015. 4. 30).

의 관계 강화를 지향하는 역사 화해 노선과 일본 국내의 평화주의를 국제적 차원에서 굳건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혁신 노선의 정책 선호가 담겨 있다. 고이즈미 담화에는 고이즈미의 반복된 야스쿠니 참배 강행에 따른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악화 상황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시대적 국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와 테러 방지·근절 목표에서는 미국과의 안보적 협력 관계 강화를 지향하는 고이즈미 정권의 정책 선호가 유추된다.

아베 담화에 나타난 일본의 국제적 과제에 대한 기술에도 아베 정권의 외교 정책 지향이 반영되어 있다. 아베 담화의 마지막 부분은 아베 정권의 외교 정책 지향의 핵심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자가 되어 버린 과거를 우리 가슴에 계속 새기겠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일본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기본적 가치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며, 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손잡고 “적극적 평화주의”의 가치를 높이 내걸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지금껏 이상으로 공헌해 나가겠습니다. 종전 80년, 90년, 나아가서는 100년을 향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일본을 만들어 나갈 그런 결의입니다.

이 부분은 가치관 외교 정책 노선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치관 외교 정책 노선은 제1기 아베 정권의 ‘자유와 번영의 호’, 제2기 아베 정권의 ‘민주적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의 바탕이 되어 왔다(Hosoya, 2011; 2013).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외교를 우선시한다는 점은 이러한 가치를 국가 정치 체제의 원칙에 포함하고 있지 못한 중국, 북한에 대한 배제의 논리가 된다. 가치관 외교는 미일 동맹 강화와 중국에 대한 균형적 정책 노선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屋山太郎, 2013). 아베 담화에 언급된 적극적 평화주의는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일본의 군사 안보적 제약 해소를 의미하는 안보 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 가치관 외교와 적극적 평화주의는 아베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 일체화되어 있다. 미국과의 협력을 실용주의나 힘의 논리가 아닌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자리 잡도록 위상지우는 것이 가치관 외교의 역할이다. 가치관 외교는 현재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이 보편적 국제 질서의 기본 원리에

협력하고 이에 공헌하는 방향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해 준다.

아베 담화의 국제주의도 가치관 외교 세계관의 반영물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 국제 질서는 존재하고, 이에 협력하는 일본을 긍정적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가치관 외교가 전제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가 얼마나 보편적인가 하는 질문에 중국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는가 의 질문에 대해서 많은 한국인들은 달리 생각할 것이다.

더불어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일본적인 것인가의 질문에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일본 역사 내력의 산물로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파악하는 오카자키에게 보편적 가치는 일본적인 것이기도 하다(岡崎久彦 外, 2015). 이러한 관점은 21세기구상간담회와 아베 담화의 실질적 설계자로 간주되는 가네하라 노부가쓰(兼原信克)에 의해서도 공유된다(兼原信克, 2011). 하지만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 오카자키나 가네하라는 ‘역사 친미’일 뿐이다. 2006년에 출판된 아베의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에는 미일 동맹 강화의 필요성과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기술이 함께 담겨 있다. 하지만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아베에게 기대한 것은 일본적 가치의 계승과 가치 부여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위한 복고주의적 교육·문화 정책 추구하고, 더불어 일본 근·현대 역사에 대한 대내외의 비판적 관점과 싸우며 ‘아름다운 나라’ 일본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드러내 줄 수 있는 역사 정책의 추구였다. 역사수정주의자 입장에서 가치관 외교에 입각한 아베 담화의 국제주의적 성격은 미국 중심의 세계사 서술 속에 일본을 객체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아베 담화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⁹하는 이유는 무라야마 담화에 사용되었던 침략, 식민지 지배, 반성, 사죄의 단어가 다시 사용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에게 아베 담화는 일본 국가 정체성 인식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세계관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 소위 ‘보편적 국제 질서’는 ‘미국적 가치’일 뿐이다. 또한 그들은 ‘미국적 가치’와 ‘일본적 가치’가 맞물려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⁹ 아베의 역사 정책에 대한 역사수정주의 지식인의 비판은 西尾幹二(2017), 西尾幹二 外(2017), 中西輝政·西岡力(2018)을 참조.

아베 담화의 국제주의적 성격과 그에 대한 일본 내 역사수정주의자들의 반발은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을 이해함에 있어서 역사수정주의를 중심에 놓는 고정적 사고방식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V. 결론

2015년 21세기구상간담회와 아베 담화는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서 역사수정주의보다 국제주의가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은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였던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아베 담화의 명백한 청자는 일본에 대한 승자였던 미국이다. 아시아의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 중심에 없다는 점에서 역사수정주의 역사 인식과 아베 담화의 전제가 되는 국제주의의 관점은 차이가 없다. 피해자 관점이 강한 한국의 담론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일본 내의 모든 관점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역사수정주의는 일본의 국가 정체성 인식에서 일본적 전통과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에, 국제주의의 관점은 세계적 보편성을 강조한다는 차이를 지닌다. 또한 역사수정주의에 입각한 역사 정책과 국제주의에 입각한 역사 정책은 미국에게 상이하게 이해된다. 정책적 차원에서 아베 정권의 국제주의적 역사 정책은 2013년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을 보는 미국의 불신과 불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었다.

그렇다면 아베 정권의 국제주의적 역사 정책의 지속성은 어떻게 전망될 수 있을까. 니시베의 자살 후 발행된 유고집에서 그는 아베에게 실용주의(기회주의)를 따르지 말라고 적어 놓았다(西部邁, 2018: kindle location 2256). 니시베는 아베가 자신의 신념을 따르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대한 대응 차원의 역사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니시베는 아베에게 신념에 입각한 역사 정책의 추구를 주문하고 있으며 아베의 역사수정주의의 신념에 대해 믿고 있다. 아베가 개별 정치인으로서 보여 주었던 강력한 역사수정주의적 지향성이 이러한 주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 주었던 정권의 최고지도자로서 아베의 정책 선택에서 신념 요소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전

략적 고려 속에서 국제주의적 관점의 역사 정책이 일본의 국가 이익과 아베 정권의 정권 이익에 부합하는 한 아베 정권은 국제주의적 관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역사수정주의적 성향의 정책도 국제주의로 포장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역사 정책에 대한 개인적 인식의 일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고이즈미와는 달리 아베는 당초에 선명한 역사 인식과 이와 부합하는 역사 정책에 대한 정책 선호를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 대한 이해가 너무 과도하게 아베 개인의 신념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치인의 정치적 선택을 신념 차원으로 환원시킬 수는 없다. 정책결정자의 정체성 차원의 신념을 파악하는 작업보다, 정책의 대내외적 제약 요인 그리고 기회 요인에 대한 분석과 정책 내용을 통해 정책결정자가 전략적으로 의도한 바를 파악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투고일: 2019년 5월 21일 | 심사일: 2019년 6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9년 7월 30일

참고문헌

- 강경자. 2015. “아베 내각 집단적 자위권 용인 논리의 비판적 고찰: 안보법제간담회 논의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67, 197-215.
- 구유진. 2016. “역사문제를 둘러싼 일본 보수의원연맹 연구.”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일본 파워엘리트의 대한정책』, 선인.
- 남상구. 2013.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 46, 227-267.
- 남상구. 2014. “고노 담화 수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49, 443-473.
- 박찬승. 2016. “동아시아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의 기념과 집단기억.” 『동아시아문화연구』 64, 13-50.
- 박철희 편. 2016.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윤석정. 2019. “전후 70년 담화와 한국: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덮어쓰기와 한국 배제.” 『아태연구』 26(1), 41-71.
- 이계황. 2003.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교육전략.” 『일본역사연구』 17,

5-21.

- 이정환. 2018a. “보통 국가’와 ‘아름다운 나라’ 사이에서: 2000년대 일본 자민당 헌법개정 논의과정의 정체성 정치.” 전재성 편. 『동아시아 지역 질서 이론』, 사회평론.
- 이정환. 2018b.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와 2012년 센카쿠 분쟁화의 일본 국내정치과정.” 『아시아리뷰』 8(1), 175-201.
- 이종국. 2016.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의 ‘합의’ 형성과 한계: 중요 ‘담화’를 소재로.” 『한일군사문화연구』 21, 61-85.
- 임은정. 2016. “아베 유신과 한반도: 제2기 아베 정권의 대전략과 대(對)한반도 정책.”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일본 파워 엘리트의 대한 정책』, 선인.
- 조윤수. 2018.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인식과 정책: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48, 113-143.
- 조진구. 2018. “일본회의의 역사인식과 교육관: 무라야마 담화 정신에 대한 도전.” 『입법과 정책』 10(2), 197-220.
- 최순욱. 2016. “아베담화의 문학적 수사(rhetoric) 읽기.” 『일본문화연구』 58, 327-349.
- 21世紀構想懇談会. 2015. 『戦後70年談話の論点』, 日本經濟新聞出版社.
- 岡崎久彦·坂本多加雄·北岡伸一. 2015. 『日本人の歴史観 黒船来航から集团的自衛権まで』, 文藝春秋.
- 兼原信克. 2011. 『戦略外交原論』, 日本經濟新聞出版社.
- 軽部謙介. 2018. 『官僚たちのアベノミクス——異形の經濟政策はいかに作られたか』, 岩波書店.
- 渡辺治. 2014. “安倍政権とは何か?.” 渡辺治·岡田知弘·後藤道夫·二宮厚美. 『〈大国〉への執念 安倍政権と日本の危機』, 大月書店.
- 北岡伸一. 2000. 『「普通の国」へ』, 中央公論新社.
- 三谷太一郎. 2015. “主体性を欠いた歴史認識の帰結は何か.” 『世界』 874, 64-68.
- 西尾幹二. 1999. 『国民の歴史』, 産経新聞ニュースサービス.
- 西尾幹二. 2001. 『新しい歴史教科書一市販本』, 扶桑社.
- 西尾幹二. 2017. 『保守の真贋: 保守の立場から安倍政権を批判する』, 徳間書店.
- 西尾幹二·中西輝政·柏原竜一. 2017. 『日本の「世界史的立場」を取り戻す』, 祥伝社.
- 西部邁. 2018. 『保守の遺言: JAP.COM衰滅の状況』, 平凡社.
- 安倍晋三. 2006. 『美しい国へ』, 文藝春秋.
- 安倍晋三·岡崎久彦. 2004. 『この国を守る決意』, 扶桑社.
- 安田浩一. 2018. 『「右翼」の戦後史』, 講談社.

- 若宮啓文. 2014. 『戦後70年 保守のアジア観』. 朝日新聞出版.
- 屋山太郎. 2013. 『安倍政権で再び大国を目指す日本—価値観外交とTPPが成長のカギ』. 海竜社.
- 田崎史郎. 2014. 『安倍官邸の正体』. 講談社.
- 中北浩爾. 2014. 『自民党政治の変容』. NHK出版.
- 中西輝政・西岡力. 2016. 『なぜニッポンは歴史戦に負け続けるのか』. 日本実業出版社.
- 中野晃一. 2015. 『右傾化する日本政治』. 岩波書店.
- 坂本多加雄. 1994. 『日本は自らの来歴を語りうるか』. 筑摩書房.
- Campbell, K. 2016. *The pivot: the future of American statecraft in Asia*. Twelve.
- Edström, Bert. 2007. *The Success of a Successor: Abe Shinzo and Japan's Foreign Policy*.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 Hosoya, Yuichi. 2011. "The Rise and Fall of Japan's Grand Strategy: The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and the Future Asian Order." *Asia-Pacific Review* 18(1), 13-24.
- Hosoya, Yuichi. 2013. "Japan's Two Strategies for East Asia: The Evolution of Japan's Diplomatic Strategy." *Asia-Pacific Review* 20(2), 146-156.
- Hughes, C. W. 2015. *Japa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Under the 'Abe Doctrine': New Dynamism or New Dead End?*. New York: Springer.
- Mochizuki, Mike M., and Samuel Parkinson Porter. 2013. "Japan under Abe: toward moderation or nationalism?" *The Washington Quarterly* 36(4), 25-41.
- 日本経済新聞. 2013. "米、日本に「自助」促す アジアで応分の負担期待." 『日本経済新聞』(10月4日).
- 日本経済新聞. 2013. "「安倍カラー」彩る保守人脈 徹底解剖." 『日本経済新聞』(11月17日).
- 日本経済新聞. 2015. "首相「過去の文言こだわらず」戦後70年談話で 全体として継承." 『日本経済新聞』(1月26日).
- 日本経済新聞. 2015. "戦後70年談話、月内に有識者会議." 『日本経済新聞』(2月7日).
- 日本経済新聞. 2015. "安倍70年談話、「未来」に軸足「侵略」「おわび」焦点." 『日本経済新聞』(3月8日).
- The Economist. 2014. "Japan should be able to defend itself like any other country. Honouring war criminals makes that harder." *The Economist* (January 18th).

Abstract

The Transition of History Policy under the Abe Cabinet: Hidden Historical Revisionism and Highlighted International Universality

Junghwa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be Statement in 2015 shows that internationalism is more visible than historical revisionism in the Abe Cabinet's history policy. While historical revisionism emphasizes Japan's traditions and unique values, internationalism upholds the significance of universal values in the world. The Abe Cabinet's history policy never targets the Asian countries and their people, but only the US government. The transition of the Abe Cabinet's history policy toward internationalism in 2015 was an effective solution for the US government's lack of confidence in Abe and his Cabinet around 2013.

Keywords | Abe Shinzo, Abe Statement, Japan's History Policy, Historical Revisionism, Internationalism, Value-Oriented Diplomacy

